

교육연합신문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황폐화되어 가는 교육현장 바로 잡길...

현실을 바로 보는 신문이 되길...

‘교육연합신문’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연합신문 창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 오신 한승균 발행인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교육은 세상을 움직이는 인간의 근본을 형성해 나가는 일인 만큼, 정치, 경제, 문화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근간이 됩니다.

또한 ‘교육’은 4천만 우리나라 국민의 공통 관심사일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많은 교육언론자가 있지만 특히 교육계의 전문가들이 만드는 교육전



국회의원 이상민(자유선진당)

문지인 ‘교육연합신문은’ 학생, 교

사, 교육행정가, 학부모들에게 ‘바른 교육, 알찬 정보, 바른 언론’으로의 역할과 충실히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미래정보화시대에 발맞춘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여, 황폐화되어 가는 교육현장을 바로잡고 올바른 교육이념을 정립하며, 모두에게 참된 삶과 지혜를 깨우치는 훌륭한 잡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 교육연합신문의 뜻 깊은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한해 한해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교육계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들이 모여 교육전문지인 교육연합신문을 창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듯이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의미는 매우 큼니다. 석유 등 천연자원이 부족했던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수한 인력을 길러낸 교육의 힘이었으며, 세계속의 IT대국으로서 21세기 정보화사회를 주도해나갈 수 있는 것 또한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긍정적이지만은 못하며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의 원인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공교육이 추락하고 사교육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폭등에서부터 빈부격차와 계층간 위화감까지 교육이 원인이 되고 있고, 심지어 출산율저하 문제도 교육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의원 김세연(한나라당. 부산 금정)

따라서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교육의 현실을 바르게 보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언론이 필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연합신문의 창간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학창시절 배웠던 ‘신록예찬’이란 수필이 기억이 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선한 푸르름을 자랑하는 5월의 신록들을 예찬했던 수필로 기억하는데 세상 주변의 푸른 나무들을 보면 지은이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교육연합신문이 5월에 신선한 신록처럼 그 새로운 시작의 싹을 틔우지만 시간이 흘러서는 울창한 숲이 되어 세상을 밝고 풍요롭게 하는 참 언론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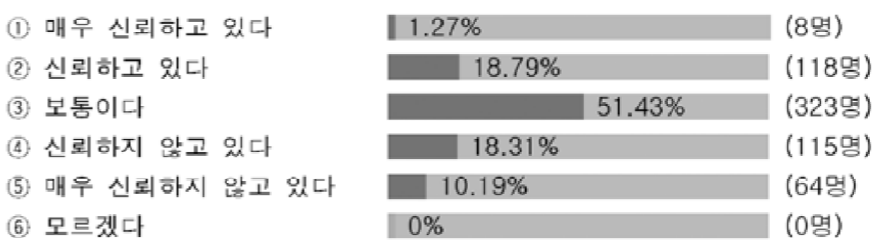
학생, 교사, 학부모, 행정으로 대변되는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증시되어 가는 신문을 만들어가겠다는 그 의지에 흔들림이 없으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인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제시해주는 참 언론으로 자리잡아 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교육연합신문의 창간을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창간 축하를 보내주신 국회의원 및 교육감님께 지면을 통해 감사 드립니다.

교원 10명중 6명 교사직업병 경험

목소리 이상, 스트레스 의한 탈모, 하지정맥류 순 교원 절반, 최근 교직만족도 떨어져 학부모·학생에 대한 권위 상실, 가장 큰 이유



우리 국민들의 공교육 신뢰도

교원 10명 중 6명 이상은 성대결절,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 하지정맥류, 무지외반증 등 교사직업병을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67.2%), 그 중 목소리 이상(성대결절)을 교직생활 중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34.4%)으로 조사됐다.

특히 목소리 이상(성대결절)의 경우, 응답 여교원 132명의 절반 이상(52.3%)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남교원에 비해 더 많이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4일, 스승의 날과 교육주간에 즈음하여 전국 교원 6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오래 서서 수업을 진행하다 생기는 하지정맥류가 발병한 적이 있다는 교원도 46명(응답자의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2006년 4월,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하지정맥류 등 교사의 직업병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로 합의했으나 직업병이라는 구체적 근거 요구와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는 관련부처들의 반대로 무산된 부분은 교직특성을 반영치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원들은 교직생활 중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교직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25.3%)을 꼽고 있으며, 과중한 수업부담과 잡무(23.7%), 학부모의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15.5%)와 교과-생활지도의 어려움(15.0%)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교직사회가 외부의 규제 및 개입이 불필요할 정도의 자율적 자정 능력과 윤리의식을 갖추고 있으나 하는 질문은,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교원이 61.5%에 달했다.

본인 및 동료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만족도 및 사기를 묻는 질문에는, 최근 1-2년간 떨어졌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게 나타났으며(55.4%), 상승했다는 응답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11.3%).

교직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는 ‘학부모·학생에 대한 권위가 상실되어서’라는 응답(66.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보수 및 후생복지 수준이 낮아서’라는 응답은 매우 낮았다(7.6%).

한편, 교원의 절반 이상(53.5%)은 교직생활 중 타 직종(직업)으로 전직할 생각까지 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은 학교교육에 있어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기적인 행동과 과도한 경쟁 심리’(46.0%)를, 그리고, 학교교육에 있어 교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와 학생들의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40.1%)을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대해서는 ‘내 자녀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교육관’(51.3%)을 학교교육에 있어 학부모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학교교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잘 수행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51.3%인 반면, ‘보통이다’는 41.9%,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6.9%로 각각 응답했다.

교원들은 현재 학교교육이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교육정책의 안정성?일관성 부족’을 가장 큰 요인(45.9%)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학

생의 학습의욕 저하 및 학부모의 교권침해’(22.0%)가 그 다음을 차지했다.

그리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4.0%)이 ‘공교육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정부의 교원대상 개혁 정책’(20.1%), ‘교원의 월의와 헌신성의 부족’(10.5%)이 뒤를 이었다.

스승의 날에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제자로는, ‘공부는 잘 하지 못했지만 꾸준하고 성실했던 제자’라는 응답이 절반이 넘었으며(51.6%), 다음으로는 ‘예의바르고 솔선수범한 제자’(26.1%), ‘말썽을 많이 피운 제자’(16.7%) 순으로 나타났다. 또 ‘어떤 유형의 학생이 사회 진출시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가장 바람직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47.3%)가 ‘인격이 성숙된 학생’이라고 응답했으며, ‘넓은 지식을 쌓은 학생’(5.1%) 및 ‘특정 분야의 지식이 높은 학생’(1.0%)이라는 응답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정치적으로는 자신의 이념 성향이 약간 보수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48.1%), ‘교원의 정치 참여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54.1%인 반면, ‘영향을 미친다’라는 비율은 39.5%로 나타났다.

계층에 대한 질문은 자신이 중산층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79.5%). 성장 및 분배정책에 대해서는, ‘경제성장보다 소득분배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응답(49.4%)과 ‘소득분배보다 경제성장에 주력해야 한다’는 응답(45.7%)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지방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주민참여를 촉구한다!”

더불어 사는 시대, 즉 사회민주주의국가라는 현대 국가의 패러다임은 국민들에게 기회의 균등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고, 기회균등은 평등한 교육 여건 속에서 달성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헌법은 제31조에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초등교육 이상의 의무교육실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의 진흥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 중에서 가장 먼저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따라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육의 이념을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 및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은 현대의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서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노동,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복지 등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국민생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민주화가 본래도에 이른 오늘날의 사회는 글로벌화 시대, 지방화 시대, 거버넌스 시대로 표현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의 교육도 국민의 정부이후로 ‘지방분권’, ‘지방화’의 기치아래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꾸준한 발전 속에 시행해 왔었다. 문제는 어떻게 이러한 이념을 달성하느냐에 있는 것이다. 교육정책적인 면에서 볼 때, 글로벌 교육, 지방화 교육 또는 지역사회교육, 거버넌스 교육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조류는 민주화된 지방교육자치를 밀도 높게 시행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방화의 개념 또는 지역사회개념이라고 표현되는 개념은 단순히 지역성의 범위를 갖는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이익추구의 집단성을 포함한 개념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국민의 참여에서 꽃을 피우는 것처럼, 지방교육의 민주교육 역시 교육을 추구하는 공동체 사회구성원인 주민의 교육정치에의 참여에서 비롯됨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06년 12월 2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핵심적인 법률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전면적으로 수정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 등의 관련법령을 대폭 손질하고, 지방교육제도를 개선하여 새로운, 그리고 본격적인 교육자치시대를 펼쳐 나아가고 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 교육감 선거를 지역 주민의 직선제로 전환하고, 둘째, 교육자치단체에 두는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시·도의회 내에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로 편입하여, 이 교육위원회를 지방의원과 교육의원(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며, 셋째, 지방 교육감과 교육의원후보자에 대한 정당추천의 금지와, 넷째, 교육감과 시·도지사 사이의 교육업무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와 전국적인 교육감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일부 보궐선거에서는 이미 신법에 의거하여 교육감선거가 행해져 오고 있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상임위원의 하나로서 교육위원의 구성은 내년(2010년) 7월 1일 전국지방동시선거 때에 지방의원은 물론 교육의원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전면적으로 치러지게 되면서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제도가 처음이기 때문에 하나의 실험적인 제도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성패의 여부는 주민들의 선거참여와 성년의 주민으로서 끊임 없는 관심과 주민 각자의 음부조만 활동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



한편 그 동안 탈모 많고 탈도 많았던 교육감선거와 교육위원선거의 잡음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적인 지방교육자치는 교육행정가들을 주민의 직선을 거쳐 선출하는 것만으로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뿐더러 또한 이 제도가 교육자치를 행하는 데에 무결점의 제도로 볼 것도 아니지만 일단 큰 밑그림이 그려진 것에는 긍정적으로 보아 환영할 만한 것이며, 앞으로 끊임없는 제도의 연구와 보완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그런데, 지난 4.29 재보궐선거에서 충청남도 교육감과 경상북도 교육감선거가 새로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재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졌지만,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전체 40.8%)의 절반수준 정도밖에 못 미치는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충남 17.6%, 경북 24.3%)에서 보듯이 주민들의 관심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자아내게 하였다.

이런 저조한 투표율은 조직력을 동원할 수 있는 소수자의 권력 장악의 기회를 제공케 하여 자질없는 교육선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우려스럽다.

뿐만 아니라 저조한 참여는 참여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주민의 가치공감대를 지닌 민주적 정당성을 이끌어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지방교육행정가와 주민간의 지역사회의식 즉,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 어려워서 거버넌스교육을 달성할 수 없다.

지방화교육 또는 지역사회교육을 위한 민주주의의 자치제는 주민의 권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러한 투표율의 저조는 선거제도는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마저 흔들리게 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분석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이겠지만, 자유선거의 원칙하에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그 제도의 성패여부가 무엇보다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높은 교육열이 오히려 사회적 폐단을 초래하는 현상을 보여 주었듯이 교육의 선풍을 뿜는 선거에 대한 관심은 정작 미미한 결과를 보여주는 이율배반적인 양상은 정말 실망스런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제 사회연대성과 사회의존성을 사상적 배경으로 하는 사회민주주의국가의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의 거버넌스시대, 지방화교육시대, 글로벌 교육시대라는 거창한 캐치프레이즈 속에 복잡하고 정치한 이론과 이념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는 소수의 엘리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주민의 작은 관심과 참여에서 주민의 권력으로서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성숙한 주민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한승훈 논설위원>